

제주평화인권헌장, 거센 반발 속 선포 강행

“도민 갈등 부추긴 졸속 추진” 비판 고조

제주도가 10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표방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지만, 행사장 안팎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 측은 헌장에 포함된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고 도민 갈등을 초래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헌장 제정 경과보고와 헌장 낭독을 진행하며 선포식을 공식화했다.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43유족회장 등이 청년·여성·이주민 등과 함께 공동 낭독하며 "도민 주권 인권 헌장"임을 강조했다.

헌장은 총 10장 40조로 이루어져 △차별금지 △성평등 권리 △43 진실 기약회복 권리 △평화와 안전 △환경기후 대응 △문화·교육·노동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43 정신을 기반으로 행정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포식은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에 휩싸였다. 행사장 주변에서 반대 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가짜 인권헌장

폐기하라"고 연호했으며, 오 지사가 입장하는 순간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행사장 안까지 진입해 선포식 진행 내내 구호를 외치며 소란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특히 헌장에 포함된 '성적 지향' 관련 권리를 문제 삼는다. "유사 차별 금지법을 제주판으로 밀어붙였다"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제정했다" "제주 정신과 종교계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성 정체성 문제를 끌어들이며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개정 또는 폐기를 촉구했다.

실제 선포식 종료 후에도 반대단체 관

계자들은 오 지사가 43평화공원을 떠날 때까지 따라다니며 항의를 이어갔다. 오 지사는 서둘러 위폐봉안실을 찾아 한화 분향 후, "헌장의 정신을 43영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으나 행사장은 끝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헌장 제정이 도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권을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조차 무시한 것 아니냐"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강요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헌장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의 인권정책 개선, 교육·홍보 확대, 차별



제주평화헌장 선포 현장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뉴스시스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으나 도민 사회의 격렬한 반발이라는 다. 노형구 기자

백운주 목사 1인 시위… “만삭·약물 낙태 허용은 재앙”

10일 아침 국회 앞 시위,
“만삭·약물 낙태 허용,
가정 파괴 및 창조질서에 반해”

최근 약물 낙태와 만삭 낙태 허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리로 나서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 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 발안 발의 여부를 넘어, 정부 부처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약물 낙태 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계의 반대 목소리는 현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여연이 진행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는 10일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가 참여해 생명 보호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다수 시민과 교계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이 발의되며 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재앙”이라며 “사회에서 살인은 중범죄인데, 태아의 생명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약물 낙태와 만삭 낙태는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만삭 낙태를 두고 이견 없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



백운주 목사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장지동 기자

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등은 만삭 낙태를 ‘태아 살인’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백 목사는 “국가가 약물·만삭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약물 낙태 합법화 이후 낙태율이 급증한 사례를 교회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법을 예로 들며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게 하면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받는다. 그런데 만삭 낙태가 허용된다면 태아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출산의 기쁨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며 “만삭·약물 낙태 허용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반한

다”며, 잘못된 성교육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명 경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백 목사는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교단에서도 함께 참여한다면 다른 교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단적 연합이 이뤄질 때 약법을 막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아름다운 피켓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신대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최근 청소년 상담 경험을 전하며 생명 경시 풍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중학생들과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헌을 가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대부분이 ‘낙태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미 다음세대 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선택권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삭·약물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생명 경시 문화가 더욱 깊어진다”며 생명 존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양구 한동대 석좌교수는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법적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지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지에 대한 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지나치게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임이나 성관계 단계에서는 자기결정권을 논하지 않다가, 마지막 낙태 단계에서만 이를 주장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악용될 여지가 많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 목사는 “만삭·약물 낙태 허용은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목소리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여연은 오는 12월 오성 식약처 앞에서 “법 개정 없이 낙태 약물 허가하는 직권 남용이자 불법”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안양대 신학대학, 건학이념 훼손 우려 제기… 교단에 지원 요청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이 학교 건학이념이 변질되고 있다며 교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학대학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총장과 법인 측을 상대로 건학정신 준수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 대신 총회 임원단은 최근 안양대학교를 방문해 채플실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서 정경인 총회장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알려졌다.

신학대학은 현 법인인 대순진리 성주회가 기독교 건학정신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학대학이 지적한 주요 사안은 ▲대순진리 성주회 이념 문구의 교내 반영 ▲기독교 개론의 교양 선택 전환 ▲채플 필수 이수 폐지 추진 ▲전공과 무관한 교원 배치 등이다.

특히 신학대학은 채플 선택 전환과 관련해 학생 2,406명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학대학은 “이는 학생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학대학은 안양대가 1948년 대한신학교로 출발해 77년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으며, 신입생 다수가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조치들이



과거 안양대 비대위가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고, 대학 매각 의혹에 대한 문제 해결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던 모습. ©기독일보DB

학과의 정체성과 교육 목표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신학대학은 “현재 재학생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교육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과 대학본부는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 대신 총회는 신학대학 측 요구를 검토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구 기자

“北인권 침묵·쿼터축제는 참여… 편향적 인권위” >> 2면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을 말한다… 다규 ‘투 헤븐’ >> 23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에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